

한국경제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¹⁾

이 영 훈

오늘 저는 기쁜 마음으로 1시간 정도 한국경제사 연구의 최근 동향 가운데 특히 저와 관련된 몇 가지 논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18~19세기 경제의 장기변동에 대해서입니다. 둘째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쿠즈네츠적인, 즉 근대적인 경제성장이 개시되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날 한국경제와 관련하여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흔히들 한국경제의 문제라 하면 재벌 또는 대기업집단의 폐단을 거론합니다만, 저는 그것보다 제일 밑바닥에서 대기업과 무관하게 적체하고 있는 영세 제조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매우 역사적인 현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18~19세기 논농사의 생산성

아래 그림은 제가 17년 전부터 전국의, 주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36개 마을에 있는 양반가와 서원 등에서 발견한 秋收記에서 뽑은 것입니다. 논 1斗落에서 수취한 지대량을 평균하여 나온 1685~1945년간의 장기추세입니다. 1두락은 대체로 200평 정도의 면적입니다.租라는 것은 정미를 하기 전의 나락 상태의 벼를 말합니다. 斗는 조선시대의 용기인데, 오늘날의 대략 5ℓ에 해당합니다.

보시다시피 17세기말부터 두락 당 지대량이 15~20두에서 19세기말의 5~10두까지 즉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890년대를 전환점으로 하여 다시 상승추세로

(1) 본고는 2014년 5월 28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 3차 경제학의 최근동향 세미나'에서 필자가 구두로 발표한 것을 녹취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림 1〉 논 1斗落當 地代量의 장기추세(租, 斗, 1685~1945)

돌아서고 있습니다. 17년 전에 이러한 사례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같은 사례가 쌓이고 쌓여 30개가 넘고 보니,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 역사의 실태가 이러했던가”하고 요사이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대량의 감소는 무엇을 말하는가. 결국 저는 당시의 지배적 산업이었던 水稻作의, 곧 농농사의 생산성이 이렇게나 많이 감소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같은 생각에 대해 반론이 많이 있습니다. 생산성이 아니라 지대율이 감소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통상 50%에 해당하는 지대율이 감소했다는 증거는 찾기 곤란합니다. 다른 한 가지 반론은 畝主가 국가에 대해 부담하는 조세를 作人이 대신 부담하게 되어 작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지대량이 작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사례를 세밀히 조사하면 18세기에는 오히려 작인이 조세를 부담하다가 19세기가 되어서는 경제사정이 나빠지니까 거꾸로 답주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즉 반론과는 반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대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한 것은 생산량의 감소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지배적 산업인 농농사에서 생산성의 감소는 경제 전반의 장기적 침체를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선왕조 18~19세기의 경제는 장기적으로 침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890년대에 반등하기 시작하는 것은 淸日戰爭 이후 일본으로의 쌀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침체를 거듭하던 경제가 개방을 맞아 시장이 열리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경제성장이 개시된 것은 1890년대부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대량의 장기추세에 대해 현대식 농법이 도입된 일제시기가 되어서도 17세기말보다 낮은 수준인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는 어디까지나 36개의 사례를 단순 집계한 것이고, 그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생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7세기말부터 시작하는 사례는 경상도 칠곡의 어느 마을인데요, 그것은 18세기말이면 시계열이 끝이 납니다. 반면에 1930년대까지 이어지는 시계열은 주로 전라도의 것들로서 19세기 전반부터 시계열이 시작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전라도 시계열을 중심으로 보면 1830년대와 1930년대는 큰 차이가 없고, 원래 수준을 회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논외의 생산성은 지방마다, 같은 지방이라도 장소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무시하고, 한껏 모은다고 모았습니다만 불과 36개에 불과한 사례를 집계하니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 그림에서 읽어야 할 것은 각 시기의 절대수준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어지는 장기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위 그림은 결국 논농사의 생산성이 17세기 말부터 19세기말까지는 줄곧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이후 반등을 시작했다는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1.1 쌀의 상대가격

논농사의 생산성이 과연 감소했는가, 그런 일이 어찌 있었겠는가라는 회의가 여전하기 때문에 좀 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 저는 양반가와 서원의 추수기 이외에 奎章閣에 소장 중인 왕실의 재정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왕실이 서울 시내에서 구입한 여러 재화의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다른 재화에 대비된 쌀의 상대가격입니다. 그 결과를 소개하면, 이미 논문의 형태로 발표되었지만, 다른 모든 재화에 대비된 쌀의 상대가격은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특히 콩, 팥, 녹두, 꿀 등의 재화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들 재화는 쌀의 수요 증가와 더불어 그 수요가 같이 증가하는 補完財 관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컨대 쌀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콩, 팥, 꿀 등의 소비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쌀의 수요가 늘어 쌀가격이 상승하면 이들 보완재의 가격도 같은 정도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실의 재정기록은 이들 모든 재화에 대비된 쌀의 상대가격이 19세기 내내 상승추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비싼 사치재라 할 수 있는 꿀과의 대비에서도 쌀의 상대가격은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19세기에 걸쳐 서울시장에서 쌀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무엇을 의미하기는 곤란할 정도로 전후 인과관계는 명확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이리할진대 농촌시장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주 지방의 서원 기록을 분석한 성심여대 박기주 교수의 연구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쌀의 공급이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음은, 다시 말해 농농사의 생산성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음은, 지금까지 확보된 실증적 근거에 관한 한 부정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1.2 산림의 황폐

그렇다면 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는가.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을 들자면 산림의 황폐라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문명이 번성하다가 사라졌는데, 그 중요 원인의 하나는 자연 파괴였습니다. 중국 경제도 18세기 이후에 정체하였는데, 그 중요 원인으로서 산림 황폐를 비롯한 생태계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같은 環境史 연구는 최근에 역사학의 새로운 개척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의 산림이 어느 정도 황폐했느냐. 그에 관해서는 1910년 8월 일제가 조선을 병합하자마자 맨 먼저 시행한 朝鮮林績調査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 나무가 왜 이렇게 없느냐, 조선 지배에서 제1의 우선과제는 산을 푸르게 하는 식림사업이라는 문제의식에서였습니다. 조사의 결과 전국 임야의 32%가 成林地, 42%가 稚林地, 26%가 無立木地로 판명되었습니다. 성림지는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개마고원이나 태백산맥과 같은 깊은 산속에 있는 원시림을 말합니다. 치림지는 1헥타르에 분포한 나무를 모두 잘라 쌓아도 10입방미터가 되지 않는, 나무가 무척 성근 상태를 말합니다. 무입목지는 나무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발가벗은 상태를 말합니다. 중부 이하의 산간지대와 남북부의 연안지대는 대개 치림지이거나 무입목지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20세기 초 한반도 전체 산지의 70% 이상은 심하게 황폐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했느냐. 대략 18세기부터 중엽부터라고 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18세기부터 호랑이의 폐해, 곧 虎患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호환이 심각해지는 것은 바로 산림의 황폐 때문입니다. 산림이 황폐하면 호랑이와 인간은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중반을 넘기면, 대략 1770년대 英祖 말년 경

이 되면, 호환은 거의 사라집니다. 한반도가 호랑이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산림이 황폐하면 농업에 어떠한 치명적인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북한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3 18~19세기 경제의 정체

농업 이외에 상업, 수공업, 무역 등 살펴 볼 분야가 많습디다만, 지배적 산업이었던 농농사의 이 같은 실태를 볼 때 18~19세기 경제가 정체한 것은 거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 50년 간 한국의 역사학계는 조선왕조의 경제는 비록 달팽이 걸음이나마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는데, 제국주의 침입을 맞아서 혼란과 파괴가 일어났고, 수탈을 받아 왜곡되었다고 주장해 왔습디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겠습디다. 엄밀히 말해 한 시대가 만들어낸 집단적 기대나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좋을 것입디다.

18세기까지는 어느 정도 경제의 안정성이 보존되었다고 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개간도 추진되어 비록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총생산량은 증가하였던 것이 아닌가, 왕조의 재정상태도 건전하여 가난한 농민을 대상으로 한 재분배경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였던 것이 아닌가 여겨집디다. 이 점을 둘러싸고서는 경제사학자들 사이에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디다만, 오늘은 그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디다.

그렇다가 19세기부터는, 보다 정확히 말하면 1770년대를 넘기면서는 생산성은 물론 총생산량 자체도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보입디다. 그 때부터는 심각한 위기였습디다. 그에 관해 저는 농촌 장시의 감소, 지방 간 쌀 가격변동의 상관성의 하락 등 여러 가지 지표를 제시해 왔습디다. 위기가 가속화하자 양반관료를 위시한 지배층의 일반 농민에 대한 수탈도 강화되었습니다. 사유재산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시장이 폐쇄된 경제에서 인구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자연에 대한 약탈, 곧 환경 파괴에 이어, 지배층의 피지배층에 대한 약탈이 심화되는, 곧 사회와 정치의 통합이 해체되고 갈등이 심화하는 일련의 과정은 거의 피할 수가 없습디다. 그렇게 한 문명이 해체되는 과정의 전형을 저는 19세기 조선왕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디다. 저는 1910년 조선왕조의 패망을 그러한 문명사적 시각에서 이해하고 있습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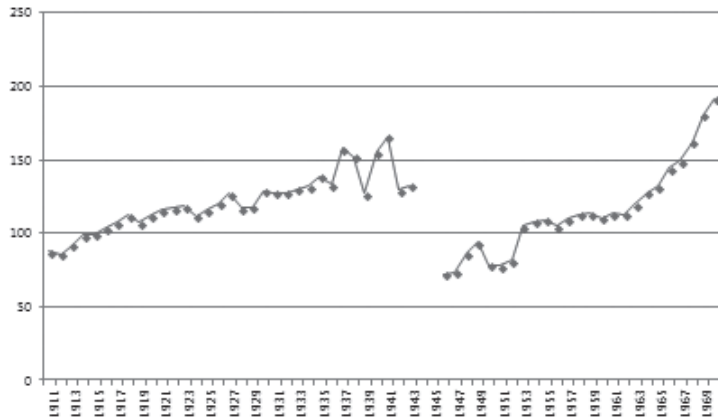
2. 근대적 경제성장의 개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18~19세기에 걸쳐 장기적으로 침체하던 농농사의 생산성은 1890년대에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일전쟁 이후 일본으로 쌀 수출이 급증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시장이 열리자 사람들은 버려둔 토지를 개간하고, 망가진 수리시설을 복구하고, 김매기에 더욱 큰 성의를 발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의 개방, 그에 따른 소득의 증가가 인간들의 경제 행동을 얼마나 크게 바꾸어 놓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이후 죽 그렇게 경제는 성장하는 추세였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우리나라 경제사에서 쿠즈네츠적인, 곧 근대적인 경제성장이 개시되는 것은 1890년대부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1910년 이전까지는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1910년 이후가 되면 이 땅을 그의 새로운 영토로 지배하기 시작한 일제에 의해 근대적 형태의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자료를 이용하여 1910년 이후에 나타난 근대적 경제성장의 추세를 명확히 밝힌 것은 낙성대경제연구소에 모인 경제사 연구자들에 의해서입니다. 동국대학교의 김낙년 교수가 그 방대하고 힘든 통계 작업을 선두 지휘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UN의 권고 하에 각국은 통일적 기준과 형식으로 국민소득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농업, 공업, 서비스업 등 각 산업별 생산 통계로부터 그 해에 창출된 새로운 부가가치를 추계하고, 거기에서 재정과 무역을 더하여 한 나라 경제가 연간 생산하거나 소비한 소득의 총액을 계산해 내는 것입니다. 이를 國民計定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부터 한국은행이 미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1953년까지 소급하여 매년 국민계정을 작성해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국민계정과 유사한 통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낙년 교수 팀이 총독부가 작성한 각종 생산량 통계, 무역 통계, 재정 통계를 활용하여 오늘날 한국은행이 행하는 동일한 기법과 동일 수준의 국민계정을 1910년까지 소급하여 만들어 낸 것입니다. 제가 보는 한, 그것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사회과학계가 거둔 최대의 성과물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아래 그림은 김낙년 교수 팀이 추계한 1910년부터 1970년까지 1인당 GDP의 장기 추세입니다. 2005년 가격이며, 단위는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남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는 북한이 떨어져 나가니까 추계의 동질성을 위해 남한만을



〈그림 2〉 남한 1인당 GDP의 장기추세(10만 원, 2005년 가격, 1911~1970)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를 보면 1910년의 1인당 GDP는 2005년 가격으로 877만원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1970년이 되면 1,918만 원 정도로 대략 2.2배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이 상당한 기복이 있었음을 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방 이전의 피크는 1941년의 1,657만 원입니다. 이후 태평양전쟁기에 감소하였으며, 해방에 따른 파국으로 1947년에는 1911년보다 낮은 720만 원으로까지 하락합니다. 연후에 조금 회복하다가 6·25전쟁을 맞아 다시 하락하였으며, 1941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1968년이 되어서였습니다.

2.1 허수열 교수의 비판

김낙년 교수 팀이 제시한 이러한 추세를 믿을 수 있느냐. 그에 대해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의 허수열 교수가 맹렬하게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략 20명 가까운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열심히 만든 통계를 허수열 교수는 혼자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국사학계는 큰 우군이라도 만난 듯이 반기고 있습니다. 국사학계는 오래 전부터 식민지 경제는 수탈과 억압으로 정체하거나 왜곡되어 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역시 경험적 근거나 분석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 당연히 그러했을 것이라는 집단적 선입관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선입관은 1960년대부터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통해 국민의 상식으로 널리 보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김낙년 교수 팀이 엄밀한 통계작업으로 그것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결론을 내렸으니, 마음이 몹시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허수열 교수가 그 통계를 비판하고 나섰

으니, 큰 우군이라도 만난 기분이었겠지요.

허수열 교수의 비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1930년대 중반 이후 1940년대 초반까지 경제가 조금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전쟁 덕분이다. 그런데 그것마저 해방과 6·25 전쟁 통해 무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리고 김낙년 팀의 통계는 1910년대의 경제성장을 과장하고 있다. 1910년대에 경제성장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시대의 통계가 불완전한 데서 생긴 착시효과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191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경제에는 아무런 본질적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1930년대의 짧은 성장은 착잔 속의 폭풍에 불과한 것이다. 근대적 경제성장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2.2 해방 후의 경제적 혼란

저는 해방 후의 경제적 혼란과 뒤이은 6·25전쟁으로 이전의 경제 발전이 무로 돌아갔다는 식의 주장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해방은 일본이 중심이 되어 조선, 만주, 중국, 대만, 남양주 등을 통합하여 구축한 거대한 경제권이 붕괴된 것을 말합니다. 게다가 남북의 분단까지 덮쳤습니다. 남한의 경제가 이러한 정치적, 군사적 충격을 맞아 급속하게 위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습니다. 인구요인도 컸습니다. 해방 당시 남한의 인구는 대략 1,6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의 인구는 대략 1,900만으로 그 사이 무려 300만이나 늘었습니다. 일본·만주의 해외동포가 남한으로 몰려들고, 게다가 북한에서 대략 100만의 인구가 공산주의세력을 피해 남으로 피난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파국과 인구요인이 겹쳐 1인당 GDP가 1910년대 이전 수준으로 까지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전 시대의 경제적 성과가 무로 돌아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업가, 엔지니어, 숙련노동자 등의 인적자본은 그대로 존속하였고, 오히려 귀환하거나 월남한 실업가들 덕분에 증가하였고, 사유재산제도와 회사·기업 등 온갖 시장경제체제의 기초는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해방과 전쟁 통해 파괴된 기계는, 방직업에 관한 사례연구에 의하면, 전쟁 이후 대부분 복구되어 1957년 현재 가동 중인 방직기와 방직기는 2/3 이상이 식민지기의 것들이었습니다. 공장에 따라서는 1980년대까지 그 기계가 그대로 가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서 1960년대에 들어 한국경제에 비교우위를 안기는 해외시장이 크게 열리니까 고도성장의 도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해방과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갔다는 허수열 교수의 비판은 지나치게 선동적이

라고 하겠습니다.

2.3 1910년대의 논농사

허수열 교수가 제기하는 또 하나의 논점은 1910년대의 논농사 생산성입니다. 1910년대의 농업통계는 불완전하며, 그로 인해 생산성의 상승 정도가 과장되었다. 수리시설이 복구되고, 비료의 투여가 증가하고, 개량종자가 보급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생산성 증대의 지속적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그리고 찻잔 속의 폭풍과 같은 1930년대를 제외하면, 식민지기의 근대적 경제성장은 있지 않았다는 것이 허수열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허수열 교수는 저를 비판의 과녁으로 삼고 있습니다. 맨 처음 제시한 그림에서 두락당 지대량이 1910년대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사학자 김건태 교수의 주장에 동조하여 18~19세기에 걸쳐 지대량이 감소한 것은 지대율이 감소했거나 작인이 답주를 대신해서 조세를 부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서 지적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저와 허수열 교수는 벌써 두 차례나 서로를 비판하고 반론하는 논문을 『경제사학』에 싣고 있습니다. 저의 허수열 교수에 대한 비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10년대 쌀 생산량에 관한 통계가 불완전하다고 하나 최초로 작성된 통계가 그러하였고, 총독부는 그 문제점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뒤 기존 통계를 대대적으로 보정하였으며, 그 새로운 결과는 믿을 만하다. 그렇게 수정된 통계마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려면, 예컨대 1910년의 쌀 생산량이나 생산성 통계가 과소평가된 것이라면, 그것을 확실히 입증할 벤치마킹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 없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식의 주관적 신념만을 자꾸 역사적 사실인양 주장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반론을 펴면서 저는 허 교수가 왜 1910년대의 新聞, 農會報, 總督府調查月報와 같은 당대의 기술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곤란하였습니다. 1910년대의 총독부조사월보는, 저는 1910~1914년 것을 오래 전에 검토한 적이 있는데, 해마다 가을 추수기에 올해는 작년에 비해 몇 % 增收 또는 減收라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것과 수정된 통계를 비교해 보면 그대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918년 총독부의 농업기술자나 통계 관료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

토함으로써 기존의 잘못된 통계를 보정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선 나온 통계를 두고 후대의 어느 연구자가 무조건 엉터리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시간이 가면 제가 직접 1910년대 기술 자료를 망라하여 논농사의 생산성 추이에 관한 별도의 논문을 작성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4 시장과 노동

개량종자가 보급되었지만, 생산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허 교수의 주장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劣性變異 효과가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개량종자라고 하나 기존의 토양이나 농법에 맞지 않아서 생산성 증가의 효과가 곧바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의 열변효과는 있었겠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개량종자가 확대 보급되었다면, 증산의 효과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개량종자가 보급된 것은 철도를 따라 분포한 일본인 농장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일본인들이 아무 이익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개량종자를 도입했습니까. 아무 이익도 없는데, 총독부가 무엇 때문에 행정력을 발동하여 보급을 촉구했겠습니까. 아무 이익도 없는데, 오히려 손해인데, 무엇 때문에 조선 농민들이 그토록 신속하게 개량종자를 받아들였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아무 이익이 없는 일은 공권력이 아무리 용을 써도 되지를 않는 법입니다.

제가 지적한 허 교수 논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노동의 투하량 변동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피를 뽑는 제초노동의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몇 10%의 증수는 충분히 가능하였습니다. 시장이 열리고, 수리 등의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나아가 재산권제도가 정비되었던 1910년대의 정치, 사회, 경제의 환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몇 선구적인 연구에 의하면 3·1운동조차 1910년대에 걸친 人權을 포함한 사회적, 문화적 성장이 초래한 정치적 변혁이었습니다. 매우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1910년대는 조선인들이 오랜만에 맞본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총독부의 수정통계대로 논농사의 생산성이 연간 1.85% 증가한 것은 충분히 있고도 남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서 오늘날 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다들 한국경제의 고질적 병폐라 하면 財閥을 떠올립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이나 대기업집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 초일류 기업이 몇 개만 더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경제는 쉽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혼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삼성이라는 대기업집단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 프로젝트수행능력이 장기간 뒷받침되어서 삼성전자라는 초일류 기업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수가 줄고 있습니다.

〈표 1〉 종사자 규모별 제조업 사업체 수의 변화(1995~2011)

단위: 개사

| 종사자 규모별 | 1995 | 2011 | 1995-2011 증가율(%) |
|-----------|-----------------|-----------------|---------------------|
| 전체 | 312,028 (100.0) | 340,909 (100.0) | 109 |
| 1~4명 | 210,570 (67.5) | 218,673 (64.1) | 104 |
| 5~9명 | 44,612 (14.3) | 59,204 (17.4) | 133 |
| 10~19명 | 27,705 (8.9) | 31,607 (9.3) | 114 |
| 20~49명 | 19,096 (6.1) | 21,411 (6.3) | 112 |
| 50~99명 | 5,743 (1.8) | 6,016 (1.8) | 105 |
| 100~299명 | 3,250 (1.0) | 3,347 (1.0) | 103 |
| 300~499명 | 469 (0.2) | 330 (0.1) | 70 |
| 500~999명 | 345 (0.1) | 198 (0.06) | 57 |
| 1,000명 이상 | 238 (0.1) | 123 (0.04) | 52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주: () 안은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임.

이 표는 통계청이 매년 행하는 전국사업체조사에서 뽑은 것으로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30만 개 이상 사업체의 종업원 규모별 분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300명 이상의 제조업 대기업이 1995~2011년에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300~999명의 기업을 중견기업이라 하는데, 2011년의 그 수는 1995년에 비해 57~70%에 불과합니다. 1,000명 이상을 대기업이라 하는데, 동기간 원래의 52%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흔히들 노동집약적 산업이 쇠퇴하고, IT와 같은 기

솔직약적 산업이 성장하니까 위와 같이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는 대규모 기업이 쇠퇴하였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IT산업이 우리보다 발전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만 유독 300명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는 대기업이 줄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나. 솔직히 말해 그에 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 3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의 2/3는 이른바 재벌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재벌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정체적입니다. 경북대학교의 장지상 교수에 의하면 2000~2009년 비금융업의 총매출액에서 20대 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21.5%에서 16.8%로 감소하였습니다. 흔히들 재벌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줄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재벌 중에서 최상위 4대 재벌의 비중이 점점 커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기업집단 전체의 비중은 정체적이거나 오히려 감소합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대규모 기업의 절대 수 자체가 줄고 있으니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수가 주는 대신 증가하는 것은 그 이하의 중소기업 또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입니다. 종업원 10명 미만의 영세한 사업체를 가리켜 소상공인이라 하는데, 표에서 보듯이 1995~2011년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5~9명의 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무려 33%나 증가했습니다. 그에 비해 종업원 50~99명의 중소기업은 5%, 종업원 100~299명의 건실한 중소기업은 3% 증가했을 뿐입니다.

요컨대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은 줄고, 영세 소상공인만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줄고 있으니 대학 졸업자들이 좋은 직장을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은 대기업에 있었습니다. 그 대기업이 줄고 있음은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3.1 과다한 영세 제조업체

제조업의 영세사업체에 대해서는 작년도 말에 산업연구원의 조덕희 박사가 제출한 흥미로운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한국은 제조업 종업원 총수가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해 9명 이하 영세사업체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나라입니다. 예컨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영세사업체 수는 15%,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10% 전후임에 비

해 한국에서는 23%나 됩니다. 23%는 OECD 국가 중에서 異常值라 해도 좋을 정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일본은 13%, 독일과 미국은 5% 수준입니다.

한국경제가 국제적으로 이상치일 정도로 영세사업체를 많이 보유하고 된 이유는 무엇인가, 나아가 영세사업체만 유독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조덕희 박사는 아직 깊은 연구가 없다고 합니다. 흔히들 재벌 때문에, 대기업과의 수탈적인 하도급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조 박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지배하는 산업과 영세사업체가 몰려 있는 산업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분야의 영세사업체라 하면 금방 동대문 주변에 몰려 있는 영세 의류업체가 생각납니다. 저도 이전에 그에 관해 한 편의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동대문시장에 입점하고 있는 의류업체는 약 3만 개나 됩니다. 그들은 제조와 판매를 겸하고 있음이 보통입니다. 이들 의류업체의 발주에 응하여 동대문 창신동에서 면목동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면적에 수 없이 많은 소규모 가내공업형 봉제공장이 있습니다. 이 외에 영등포 구로구 일대에 분포한 소규모 기계공업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방의 주요 공업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가내공업형 영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은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수출시장과 거의 무관한 존재들입니다. 여기가 바로 저임금, 단기고용, 실업급여의 결여, 再就業 훈련의 결여와 같은 빈곤과 低福祉의 온상입니다. 이들 영세 제조업체만 부쩍 증가하고 있음이 오늘날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최대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조덕희 박사에 의하면, 그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한국의 많은 경제학자와 국책 연구기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3.2 자영업자들의 過當競爭

제조업만 아니라 전체 산업으로 눈길을 돌리면, 전국에 도합 340만 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위와 꼭 마찬가지로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은 역시 9명 이하의 소상공인들입니다. 예컨대 5~9명 소상공인의 수는 1995년에 총 210,512였는데, 2011년의 그것은 316,659로서 50.4%나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 사업체 총수 347만

여 가운데 9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319만으로서 9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앞서 언급한 약 34만개의 제조업체를 제외한 270만여 개가 이른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되는 셈입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관해서는 삼성경제연구소의 김창욱 박사가 작성한 좋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2010년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중이 터키, 그리스, 멕시코 다음으로, 제4위의 높은 수준입니다. 1인당 GDP가 비슷한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에 비하면 그 역시 이상치라 해도 좋을 정도의 높은 수준입니다. 이 역시 한국경제의 비교적 특질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특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리를 다녀 보십시오. 전국 어디를 가나 사람이 다니는 거리면 상점이 늘어서 있습니다. 서울에는 裏面道路까지 상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들 자영업자의 근 절반은 3년 이내에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과당경쟁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큰 문제 하나로 家計負債가 지적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들 자영업자에 있습니다. 집을 잡히고 은행 대출을 얻어 가게를 열었는데, 그 절반이 부채만 안고 3년 안에 폐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소득분배가 자꾸 나빠진다고 합니다.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소수 부유층 때문에, 또는 재벌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만,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음에 불과합니다. 소수 대기업과 그 직원들의 소득 수준이 높고 높아지는 것은 그들이 혁신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빈곤한 것은 그들이 혁신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벌 때문이 아닙니다. 종사하는 산업과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왜 혁신을 하지 못하는가. 저는 자영업자 간의 과당경쟁이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 죽고 나 살자는 제로섬게임의 질 나쁜 경쟁입니다.

3.3 왜 통합을 하지 않을까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 신도림역 부근에 치킨집이 30개나 있다는 것입니다. 신도림역을 이용하는 流動人口가 북적대는, 면적이 1.6km²에 불과한 조그만 범위에, 교촌치킨, BBQ치킨, 둘둘치킨, 오븐에 빠진 닭 등등, 무려 30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서울의 경우 평균 200m마다 하나의 편의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하나의 의문을 떠올립니다. 이들은 왜 통합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입니다. 통합도 하나의 혁신입니다. 경영조직 상의 일대 혁신이지요. 혁신을 하면 소득이 증가합니다. 예컨대 신도림역 부근의 30개 치킨집 사장들이 모여 우리 5개로 통합하자고 합의했다 칩시다. 그러면 영업장의 임대료 비용만도 1/6로 금방 줄지 않습니까. 영세 자영업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임대료 아닙니까. 그것이 당장 1/6로 줄어드니 큰 수익이 날 수 밖에 없지요. 출혈 광고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인건비도 줄일 수 있지요. 사장님들이 직접 회계도 보고, 심지어 배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난 수익은 출자 자본금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3년 안에 절반이 망하는 비극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통합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 쉽고도 쉬운 혁신을 행하지 않을까요.

시각을 넓혀 한국의 기업들을 보면 크고 작으나 모두 1인이 지배하는 주식회사입니다. 동종의 업자들끼리 파트너십을 조직한 合資會社 등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라는 조직이 처음 보급된 식민지지만 해도 합자회사와 같은 파트너십이 많이 있었는데, 점점 작아져서 1960년대 이후는 거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의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지배주주가 되어 무한책임을 지는 대신, 소수의 몇 사람은 유한책임만 지는 주주로서 경영에 동참하는 합자회사가 많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는 증가하는 추세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합자회사가 그렇게도 없습니까.

3.4 낮아지는 사회적 신뢰

이 같은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과 역사가 만나는 경계에 서게 됩니다. 위와 같은 현상은 한 나라의 사회와 문화, 그 역사적 특질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제 현상은 결코 경제적이지만은 않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총체적으로 역사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우리의 시장경제체제가 언제 어떻게 성립했고, 국제적으로 어떠한 비교적 특질을 이루고 있으며, 그를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요인은 무엇인가, 각 시대의 정치는 경제를 어떻게 규정했는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지난 4월에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5년마다 조사하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의 2010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한국에서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은 26%의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10%대의 후진국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국은 그렇게 형편없는 후진국은 아닙니다. 그 점을 전제하고 말하자면 한국은 중진국 이상의 여러 나라 가운데 사회적 신뢰의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의 선진사회일수록 일반적 신뢰의 수준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소득 수준의 문제만은 아니고 사회적, 문화적 수준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지요.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에서 사회적 신뢰의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82년경 한국에서 위와 같은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은, 사회학자들은 이를 일반적 신뢰의 수준이라고 합니다만, 38%의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이 조사를 거듭할수록 점점 낮아졌습니다. 예컨대 1990년에는 34%, 1996년에는 30%, 2000년에는 27%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0년의 마지막 조사에서는 26%로 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기업은 그 조직의 형태나 원리가 나라마다 상이합니다만, 하나의 신뢰조직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됩니다. 사회적 신뢰가 높은 나라에서는 기업의 규모도 큼니다. 반면에서 사회적 신뢰가 낮은 나라에서는 대규모 기업이 발전하기 힘듭니다. 일찍이 후쿠야마라는 사회학자가 그의 『트러스트』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입니다만, 크게 보아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대기업의 수가 줄고, 영세한 제조업체나 자영업자가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은 그 한편의 원인이 사회적 신뢰의 부족이나 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해도 그리 틀린 이야기는 아닐 터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그렇게 低信賴의 사회가 된 원인은 무엇이나,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나 등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 여기서 제 이야기를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하기 위해 적어도 지난 3~4세기에 걸친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學際的인 탐구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1: 18~19세기 논농사 생산성 하락 추세와 관련하여 산림 황폐화를 지적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요인은 없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漁村 조사를 죽 해 왔는데, 어촌의 경우 대체로 19세기 후반이 되면 어촌의 경제를 지지하던 양대 魚種 가운데

하나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해안의, 남한에서 가장 커다란 어장인데, 그 어촌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이 되면 경제적으로 완전 몰락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서 양대 어종의 하나가 사라져 버려요. 이 어촌의 생업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봄 어업, 다른 하나는 해운업, 곧 유통업이고, 나머지 하나는 겨울 어업입니다. 그런데 겨울에 잡은 어종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실은 이것과 산림황폐화는 좀 연결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답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하는 환경사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중국 환경사 연구에 의하면, 18~19세기 산림 황폐 등 생태계의 큰 변화가 연안지대의 어업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일본에도 사이토 미노루 같은 경제사학자가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19세기 어촌 경제의 변화, 어종의 소멸도 필경 그 시대의 산림 황폐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고 봅니다.

질문 1: 그 어촌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면, 19세기가 되면, 특히 후반기에, 해운업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도의 쌀과 경기남부의 물자를 교역하는 중개업이 망하는데, 그 역시 전체 경제 상황의 반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 역시 19세기에 심화된, 19세기 중반을 넘기면서 더욱 심각해진 위기가 그러한 어촌 경제 변화의 시대적 배경이 아닐까요.

질문 1: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아까 통답집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마을도 보면, 기계를 구입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농지면적은 작운데 집집마다 구입을 하니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부도가 나는 집들이 꽤 많습니다.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했거든요.

답변: 왜 농가마다 그 비싼 트랙터를 사느냐. 그것 참 재미있네요. 정부에서 사라고 돈을 주니까 샀지만, 사실은 빚이거든요. 마을 공동체의 건전한 의사 결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면, 예컨대 우리 마을 20호에 5대 정도의 트랙터만 있으면 충분하니 집집마다 1/4을 분담하여 5대를 공동구입하면, 기계의 효율성도 높이고, 금융비용도 낮추고, 그렇게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농가마다 제

각기 다 구입할까요. 그래서 농가부채가 늘고 있을까요. 어쨌든 현실은 그러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농협의 역할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협의 기능 가운데 共同出荷는 선진국 수준이라고 합니다. 농가가 노령화하여 직접 출하할 능력이 없으니까 농협에 출하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아가 농산물을 공동으로 선별, 가공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제작하여 식료시장에서 경쟁력과 고소득을 실현하는 공동사업으로까지는 좀처럼 나아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선진국의 농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농민들의 공동 이해, 공동 투자, 공동 책임이 필요한데, 그러한 사회적 가치들이 쉽사리 조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공시장이나 식료품 시장은 농협이 아니라 다른 대형 식료업체들이 거의 다 지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농업의 생산성 증가는 상당 수준인데, 소득 수준의 증가는 정체하는 중요한 원인은 여기에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농협을 중심으로 한 생산, 유통, 가공의 공동체가 성립해 있지 않은 것이죠. 마을 단위의 공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농촌 마을을 잘 뭉쳐진 커뮤니티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도림동 치킨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림동에 잘 뭉쳐진 상인사회가 예부터 존재했다면 서로 죽이기 식의 경쟁은 자율적으로 통제되었겠지요.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 상권을 지배하는 지역의 상인사회가 성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함부로 들어와 아무렇게나 점포를 벌일 수는 없습니다. 그에 비하자면 신도림은 아무 주인도 없는 뜨내기시장인 셈입니다. 주민도 뜨내기이고 상인도 뜨내기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1.6km²에 무려 30개나 되는 치킨집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앞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의 역사적 특질을 반영하는 사회학적이며 인류학적인 현상입니다.

질문 2: 선생님의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동대문시장이라든가 신도림역 부근의 치킨집이라든가 그런 현상으로부터 요즈음 많이 이야기되는 社會的 經濟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생님이 보기에 사회적 경제가 영세 상인들이 살 수 있는 대안으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사회적 경제가 여러 선진국에서 많은 성공사례를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적 경제가 경제의 주류를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지방 단위의 소규모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지방시장을 그들의 상권으로, 그들의 문화권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런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컨대 제가 살고 있는 서울 관악구 행운동이라 하면, 행운동 주민들이 행운동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을 이용하여 행운동의 시장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행운동의 지역 문화를 발전시킬 의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역공동체의 활동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경제는 그것을 주도하는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 사업이 되거나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과연 그러한 지역공동체가 존재하는가, 성립할 수 있는가. 이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3: 아까 허수열 교수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마침 저도 그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허수열 교수는 개량종자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부정했는데, 개량종자는 조선에 온 일본인들이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고, 그들이 좋은 땅을 차지했으니, 생산성이 증가한 것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 그런 것이지, 종자개량의 효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변: 맞습니다. 허 교수는 두 가지를 주장한 셈입니다. 개량종자 보급에 따른 생산성 증가 효과는 일본인 농장이 원래 비옥하기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를 토지효과라 합시다. 둘째 일본인 농장을 넘어 조선인 농지로까지 개량종자가 보급되었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조선의 토양에 맞지 않은 외래 종자라서 곧바로 열성변이를 일으켜 생산성 증대의 효과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열변효과라 합시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실증적으로 충분하게 뒷받침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효과에서 대해서 말하자면, 일본인들이 들어와 농장을 차린 토지는, 제가 아는 한, 대부분 河岸이나 沿岸의 低地帶에 위치한, 개간의 가능성이 있는, 값싼 劣等地였습니다. 비옥한 토지를 비싼 값을 주고 매집한 것은 아니지요, 그 열등지가 일본인 농장주의 간척사업이나 제방축조나 수로개통 등의 토지개량에 따라 비

옥한 농장으로 변해 갔던 것이지요.

열변효과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이 발생하는 데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보급이 확대되어 갔다면, 총생산이 상승하는 효과는 열변효과를 능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가설에 불과합니다. 왜 가설을 놓고 다툼니까. 저는 이를 답답하게 여깁니다. 1910년대의 추수기를 직접 보세요. 개량종자를 파종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추수기를 보면서 저는 개량종자가 신속히 보급된 원인으로서 생산성 상승보다 가격 상승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수출할 때 더 높은 가격을 쳐 받는 것이지요.

어쨌든 추수기를 보면 이런 저런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 자료를 통해 열변효과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몇 년째부터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증적인 연구도 하지 않은 채, 가설 수준의 이야기만 자꾸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곤란하지요. 언제 시간을 내어 제가 직접 손을 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입니다만, 마침 그 문제를 연구하신다니까 그런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꼼꼼하게 분석해 주길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51-74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전화: (02) 880-6368

팩스: (02) 886-4231

E-mail: yhrhee@snu.ac.kr